

김정일체제의 경제정책 전망

- 김정일 정권의 정책 전망 / 38
- 김정일의 경제분야 장악과정과 주요 인맥 / 52
- 김정일체제의 대외경제정책 전망 / 62



김정일 정권의 정책 전망

서재진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서론

80년대말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이후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북한이 취했던 대응책은 다음의 네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은 일본과 수교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90년 9월의 3당공동선언 이후 1992년 11월까지 8차에 걸쳐서 수교회담을 추진하였고 1991년에는 유엔에 가입하였다. 둘째, 대남 적대정책을 지속해오던 북한은 남한과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1990년 9월부터 1992년 9월까지 8차례의 고위급회담을 지속하면서 남북간에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까지 채택한 바 있다. 셋째, 북한은 1991년 8월 나진-선봉지구 자유무역지대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넷째, 북한은 사회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위기적 상황에서 북한이 대응책으로 내놓은 이 계획들은 사회통제정책을 제외하고는 1992년 말에 미국에 의하여 제기된 북한의 핵개발 의혹 문제로 전면 좌절되고 말았다. 작년 10월 21일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핵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의 일탈자로 몰려 압력을 받았고 경제제재 조치가 직접적으로 취해지지는 않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국제적 고립을 당하였다. 그러한 와중에서 김일성이 사망하였으며, 정권교체기의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의 과도기적 체제단속 전략만이 북한의 정국을 지배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적 방향은 김정일 정권에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김정일 정권의 출범이 임박한 시점에서 우리의 관심은 김정일 정권이 어떠한 방향의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승계하게 된 것이 김일성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김일성시대의 연장이 될 것인지, 또 아니면 김정일 이후의 새로운 시대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에 불과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글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김정일 정권이 어떠한 정책을 구사할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정일 정권의 성격

김정일 정권이 어떤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는 김정일 정권이 가지고 있는 몇가지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규정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의 성격을 간략히 규명해 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① 권력유지 방식의 특수성

북한 김일성의 권력유지 방식은 스탈린주의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일성은 소스탈린이었다. 스탈린 사후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배이념은 수정주의화 또는 탈스탈린주의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반하여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가 다원화될수록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을 창출하여 전형적인 스탈린주의를 고수하였다. 스탈린의 우상숭배를 비판한 후르시호프가 김일성의 우상숭배에 대해서도 비판하자 김일성은 정치적 내정간섭이라고 매우 노골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수정주의를 막기 위하여 더욱 문을 굳게 닫아 외부의 바람을 차단하고 체제를 더욱 경직화하였다. 개인숭배 비판운동과 수정주의가 북한에 침습되지 못하게 하여 정권을 수호하는 일이 지금까지 폐쇄주의를 고수해 온 이유이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이란 곧

차단과 단절의 이데올로기이다.

특히, 80년대 후반 동구사태 이후 소련의 강경보수파가 주도한 쿠데타가 시민의 저항으로 실패하고 공산체제가 종식된 후 북한의 폐쇄화 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여 폐쇄주의 노선을 더욱 강화하였다. 소련과 동구의 공산당을 몰락시킨 자유화 바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외부바람'을 막기 위해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 관한 자료를 모두 회수,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김정일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

김정일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모순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권력유지 방식은 김일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외부의 자유화 바람의 침습을 막기 위하여 외부정보의 차단과 단절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모순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권력유지 방식은 김일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첫째, 외부의 자유화 바람의 침습을 막기 위하여 외부정보의 차단과 단

절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정일 정권의 또 하나의 특징인 김일일 개인숭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이미 자기의 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우상숭배 방식의 통치를 지속하겠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위의 두 가지 특성은 권력유지를 위한 기본적 요구(imperative)이기 때문에 폐기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의 기존의 권력유지 방식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개혁·개방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② 남북분단과 적대관계

북한의 대내외적인 정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북한이 남북으로 분단된 대결구조 속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이 분단의 요인은 비슷한 경험을 가졌던 동독, 베트남에서도 비슷하게 작용하였다. 동독은 서방의 강대국으로 성장한 서독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독의 문화적 침투 등 화평연변의 망령에 시달리다가 결국 서독에 흡수되고 말았다. 베트남은 분단 이후 30여년의 내란을 치르다가 통일을 이루어 분단문제가 해소된 이후인 1979년 9월 당 중앙위 6차 총회를 기점으로 비로소 적극적 개혁·개방으로 정책선회를 할 수 있었다.

북한은 분단의 상황 때문에 경제발전에 전념하지 못하고 국방·경제 병진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잠재력을 엄청나게 소모하여야 했다. 또한 북한이 사회주의체제의 비효율성이 확인된 시점에서도 사회주의 이념을 변화시켜 체제효율성의 개선을 시도하기가 어려운 까닭도 남한과의 체제경쟁을 의식한 자존심 때문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더라도 남한과의 체제경쟁의 조건에서는 인민들에게 충격적인 정보가 유입되지 않는 방식의 전략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분단상황은 지금까지도 강력한 정치적 통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으로 적극 활용되었기 때문에 대

내 개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③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이 준 결과에 대한 인식

김정일 정권의 정책방향을 규정하는 또 하나의 변수는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이 가져온 결과이다.

북한 지도층이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중요한 교훈은 개혁을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더욱이 개혁을 시도한 지도자에게 반드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1989년 북경 천안문사태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경제활동 동을 부추기는 것만으로도 당의 사회통제력이 약화되고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증대되는 결과를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특히,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의 처형, 동독의 호네커의 망명, 레닌 동상의 철거 등은 김정일에게 개혁·개방 공포증을 유발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북한의 지도부는 북한과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소련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의 필요성은 당국이 범한 실수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지도자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하거나 정정할 것이 없으며 북한의 체제는 강하고 단일화된 당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인민들은 독창적이고 가장 발달된 이념 체계를 제시한 위대한 지도자 밑에 결속돼 있

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은 모두 체제를 경직시키는 요인들이며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제한시키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의 폭을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대외정책 전망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북한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큰 부문이 대외협력 관계이다. 사회주의권이 사실상 없어진 상황에서 북한이 취해야 할 당면한 정책 방향은 일부 자본주의 국가와 관계를 개선하여 경제협력 상대를 새로 창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반응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난 부문이 대외정책이었다. 북한은 1991년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남한과 1년여 동안의 고위급 회담을 통하여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기까지 하였다.

북한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대외정책은 일본과의 수교협상이었다.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를 국제고립 탈피 및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마스터카드로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

로부터 50억 달러 규모의 보상금을 획득할 수 있고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듯하다. 1990년 9월 북일간에 3당공동 선언이 있는 후 8차례의 수교회담을 통하여 수교문제가 급진전되었으나 북한의 핵개발 의혹 문제가 제기되자 수교협상은 중단되었다. 핵문제가 북미간의 문제로 확대되자 북한은 핵문제를 오히려 카드화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질서의 해체모니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통하지 않고는 일본과의 수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혹자는 북한이

“

대외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일 정권은 기존의 '통제된 개방정책'을 확대하고 대미·대일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이른바 '실용주의적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제적 고립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

핵무기 개발을 정권 안보의 가장 중요한 카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개발할 때까지 시간벌기 작전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북한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개발을 고집할 경우 북한은 현안 문제인 국제고립 탈피와 경제난 해결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40여년 동안 적대관계에 있었고 핵문제로 참여한 대립을 경험했던 미국과 일련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2년 동안 끌어왔던 핵문제를 매듭 짓

고 대화와 타협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북미간 핵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북한은 외교대표부 개설, 경수로 지원 및 대체에너지 공급 등의 합의를 받아놓고 있다. 북한은 이를 기회로 경제난을 해결하고 체제유지에 필요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북미관계의 대체적인 방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교역 및 투자장벽을 부분적으로 해제하고 연락사무소를 교환 설치하는 등 정치경제적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다.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룩한 북한은 이어서 일본과의 수교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대외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기만 하면 서방과의 관계를 더욱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회생을 위한 대외환경은 조성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망해 볼 때 북한 신정권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둘 것임을 감안한다면 핵활동의 동결에 관한 미국과의 합의는 대체로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양국관계는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대외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일 정권은 기존의 '통제된 개방정책'을 확대하고 대미·대일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이른바 '실용주의적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제적 고립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중, 러의 대한수교 등 주변정세의 변화 속에서 대미·대일 관계개선이 북한의 경제난 회복과 군사적 고립타개에

기여함으로써 체제유지 및 정권안정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대미·대일 관계정상화에 사활을 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조만간 관계정상화를 위한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게 될 터인데 이는 김정일에게 국제적 위신을 높여주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국민들에게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그들 나라들과 공식적인 적대정책을 포기하여 경제협력을 얻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들 나라에 대하여 인적·문화적·사회적 교류를 전면 개방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남정책 전망

김정일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는 대남정책의 방향이다. 남북분단은 지금까지 김일성 정권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편입이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는 남북관계가 김정일 체제에 가장 부담스러운 과제가 될 것이다. 남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일시적으로는 경제회생에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유화바람이 유입되어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긴장관계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회생에 장애로 작용하여 결국 체제변화를 촉진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으며 대결상황을 유지하는 쪽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미제국주의'와 남한에 대한 비난으로 체제를 유지하던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적대주의를 폐기하면 체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외부의 적이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

서 북한은 남한이 주적이라는 전략을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정권 출범 직후 한동안 대남비방을 자제하던 북한이 얼마 후 재개하여 더욱

강도를 높인 것은 북한사회 통합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비방은 남한과의 대결이라기 보다는 북한내부의 사회통제를 위한 내부용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

지금까지 북한은 남북대화나 남북관계 개선을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도구나 협상카드로 활용하였다. 1991년 말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북한이 일본과의 수교를 적극 추진하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1989년 2월 28~1990년 7월 26일 사이에 8차례의 예비회담과 2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고

위급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 문제를 협의할 것에 합의한 이후 1990년 9월~1992년 9월까지 8차례의 고위급회담을 지속하면서 남북간에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은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과의 수교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었다. 북한과 일본은 1990년 9월의 3당공동선언 이후 1992년 11월까

“
 이제는 북한이 남북 대화에 응해야 할 구체적인 유인요인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당분간 남한측의 관계개선 요구에 응하기 보다는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지속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 8차에 걸쳐서 수교회담을 추진한 바 있었다. 그러나 회담은 핵문제의 돌출로 말미암아 결렬되었다.

따라서 1991년 12월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게 된 배경은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일본과의 수교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전술적 의도에서 응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김일성이 우리측 재의를 수락하여 정상회담을 7월 25~27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당시 북한이 IAEA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상태에까지 봉착하게되어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상회담 카드는 남북간 관계개선을 희망

해서라기 보다는 북한이 그 당시의 핵협상의 불리한 국제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결국은 카터·김일성회담과 남북 정상회담개최 합의를 계기로 북미 핵협상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해야 할 구체적인 유인요인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당분간 남한측의 관계개선 요구에 응하기 보다는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지속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최대한 양보를 얻어 내려는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쌍부적인 평화협정 체결, 비전향 장기수 송환, 한국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는 한편,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의 장애라고 거론해 왔던 몇몇 사안들을 집요하게 들먹이면서 남북대화 단절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선전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한에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부처간, 정당간, 정부와 사회세력간 정책대립이 표출되는 바, 북한은 앞으로도 중요한 쟁점에 대한 남한정부의 정책대립을 유도하여 사회혼란을 조장할 것이다.

북한은 대남 통일전선전술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남 통일전선전술의 핵심적인 구호가 두가지 였는데 하나는 과거의 군부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겨냥한 반파쇼민주화투쟁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과의 의존적 관계를 겨냥한 반미자주화 민족주의이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민주화라는 구호가 설득력을 잃게 되자 반미 민족주의를 주요 대남전략의 구호로

활용하고 있다. 1993년 4월의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나 최근의 대민족회의 참여 제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북한은 대미관계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미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미합의 이후 미국 및 일본, 한국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없이 북미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단히 강조해왔다. 이러한 한미일의 합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5일 미국의 민주·공화양당 의원들이 공동제안 형식으로 상하 양원에 제출한 대북결의안의 핵심은 미국과 북한간 핵합의 이행과 남북한간 관계 진전이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일본과 한국 양국은 2월 13일에 북한의 제네바합의 이행과 북일수교를 사실상 연계하여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여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북일 수교협상을 재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또 북일 수교협상이 재개된 후에도 남북대화 재개 등 북한의 제네바합의 이행과 수교협상의 진전을 병행키로 합의하였다(「동아일보」, 1월 13일자).

또한 미국이 제네바합의 이행의 일환으로 취한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도 남북관계 개선을 회피하는데 대한 한미간의 공조체제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유력하다.

이러한 압력에 대하여 북한은 핵협상 때와

같은 강력한 협상카드가 없다는 것이 북한이 직면한 문제점이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남한과의 대화 없이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북한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시늉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북한이 앞으로 상당기간 활용할 대남정책의 방향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대체로 해외 동포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과는 당국간 공식적 경제관계는 가급적 피하겠다는 것이다. 비공식적인 방법의 경협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나진-선봉지역에 한정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정책 전망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의 최대 정책과제가 체제고수였다면 이제는 경제회생일 것이다. 사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이 붕괴하여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진 1989년 직후 북한이 취했던 정책방향의 핵심은 위기에 처한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이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중국의 경제특구식 개방모델을 일부 도입하여 나진-선봉 지역에 자본주의적 경제특구를 건설하고, 일본과 수교를 추진하여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배상금을 도입하여 경제를 회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계획이 핵문제의 돌출로 실행되지 못했던 것이다.

지난 연말에도 북한은 당중앙위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제3차 7개년 경제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채택 등 경제회생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이 당장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나진-선봉 지역에 경제특구 건설을 통하여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고 금강산을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제한된 지역을 개방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이 보여왔던 철저한 폐쇄주의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제도나 소유제도의 도입과 같은 체제개혁을 추진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시기상조이다. 특구 이외의 지역에서 자본주의적 시장메카니즘의 도입, 또는 토지의 사유화와 같은 제도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본주의적 제도 도입은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충격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부르조아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변화는 억제할 것이다. 김정일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의 회생보다는 김정일 정권의 안정된 유지일 것이다. 핵문제가 돌출되기 이전에 북한이 추구했던 정책방향이 이제 비로소 본격 실행되게 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북한이 취할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사회주의체제와 기존 정권을 유지하면서 경제정책을 변화하는 유형에 더 가까운 것

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도 훨씬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변화만을 선택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정책들을 모방하여 왔고 중국지도부의 조언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김정일이 중국의 호요방을 만났을 때 호요방의 관광개방 요구에 다음과 같이 '약속'한 것으로 진술한 바 있다. "우리 개방정책 이제 하겠다. 개방정책 하겠는데 제한된 국부적인 군데만 하겠다."

이러한 모델의 개혁·개방은 이미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은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의 건설과 UNDP 주관의 두만강 개발 사업이다. 북한은 이들 지역에 대한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

해 1992년 4월에 개정된 헌법에도 대외경제협력 관련 조항을 첨가하였으며 조선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 16개의 관련 법안들을 이따 마련하였다. 이러한 법적 제도화의 내용은 1980년대의 합영법보다는 훨씬 진전된 것임은 사실이다.

북한이 제한된 일부지역이기는 해도 자유무역지대 내에 자본주의제도를 도입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의미있는 정책전환임에 틀림없다.

당분간은 나진-선봉 지역에 한정되겠지만 남포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북한의 지도부가 의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과급효과가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은 어느 정도의 전환점을 맞고 있음에 틀림없다.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에 대한 대가로 1994년 말까지 5만 톤을 시작으로 매년 50만 톤 상당의 중유를 북

한에 공급하겠다고 합의하였고 이미 약속한 대로 3개월 이내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일본 역시 나진-선봉 지역내 임가공 및 광산개발, 사회간접자본 개발 등의 경제진출을 위해 수

“
 사회주의체제의 비효율성과 인민들의
 근로의욕 상실 때문에 경제쇠퇴가 가중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혁 없이
 나진-선봉 등 제한된 지역에 외부 자본을
 도입하여 경제를 치유하겠다는
 김정일의 구상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북한이 보다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기까지는 현재의 소극적
 정책의 시행착오를 한번 더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교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수로건설 지원과 대체에너지 제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일본과의 수교협상이 추진될 경우 50억 달러 정도의 배상금이 북한에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제난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기업도 부분적으로 대북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서 북한 경제의 회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가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

을 통해서 경제 효율성이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단기적으로 정권안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의 통제와 폐쇄정책이 경제회생에 부정적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구상하고 있는 개혁과 개방 정책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며 경제 효율성 개선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나진-선봉 시구에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겠지만 사회간접자본(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미비로 인해 공장가동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외국기업의 진출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은 상당한 체제적 위협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정권유지를 위한 우상숭배 및 폐쇄주의의 전략, 분단체제의 한계, 개혁·개방한 사회주의권이 보여준 혼란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체제개혁을 동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체제개혁을 수반하지 않은 제한정된 지역에 개방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개방정책이 북한기업에 생산 및 경제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파급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면 유치된 외국기업의 생산력이나 외화가득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게 된다.

사회주의체제의 비효율성과 인민들의 근로 의욕 상실 때문에 경제쇠퇴가 가중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혁 없이 나진-선봉 등 제한된 지역에 외부 자본을 도입하여 경제를 치유하겠다는 김정일의 구상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북한이 보다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기까지는 현재의 소극적 정

책의 시행착오를 한번 더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통합 정책 전망

김정일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의 하나는 주민의식의 변화이다. 주민들의 사회의식이 변화한 것은 외부로부터 스며들어온 바람의 영향도 있지만, 경제가 침체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생계획득의 자구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몸으로 익힌 체험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 주민의 사회의식은 1980년대 후반 들어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하게 되자 식량과 생필품 확보를 국가에 기대하기 보다는 개인 스스로 독자적으로 책임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게되면서 크게 달라졌다. 즉 암시장 및 지하경제의 선호, 화폐에 대한 가치 변화, 개인소유주의, 그리고 뇌물의 성행, 절취(pilfering)의 일상화 등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확산되었다. 이전에는 북한 주민의 지배적 가치는 정치적으로 인정받아 공적 부문에서 출세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돈을 버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와 일탈행위의 확산은 단순히 사회적 병리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사회변동의 지표이다. 북한에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이 국가의 공식 분배통로를 통하여 인민들에게 공급되지 않고 암시장으로 흘러 나가는 등 이미 유통구조에 자본주의적 요

소가 태동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에서는 자본주의적 제도를 도입하는 체제개혁을 기피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이미 체제개혁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암시장에서 경제행위를하기를 선호하고 개인주의에 탐닉하는 사람들은 전체인구의 60%에 가까우며 약 40%의 주민들만이 체제에 통합하여 기존체제를 지탱하고 있다. 이것은 80년대 후반 이후 급속하게 변화한 수치이다.

북한 주민의 정치의식은 집단간에 큰 차이가 있다. 북한 주민은 신원문건에서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한 군중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들 세 집단은 정치적 의식에 있어서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군중과 기본군중은 대체로 북한 체제에 통합하여 높은 지위를 얻음으로써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들로써 체제를 지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이다. 그들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김정일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무모한 짓이기 때문이다. 철저한 감시와 무자비한 처벌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오랫동안 김정일에 대한 이상화 교육과 김정일의 교시에 대한 학습의 효과 때문에 김정일의 지시는 대체로 옳다고 본다. 김일성에 비하여 김정일의 권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일에 대하여 비판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김정일에 대하여는 대체로 매우 무서워하고 있다.

50대 후반의 사람들은 김정일에 대한 평가가 젊은 세대보다는 부정적이지만 젊은 세대는 김

정일을 당연한 후계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40대 이하의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김정일은 이 세상의 전부이네”라는 노래를 당연시하고 자연스럽게 부르곤 한다고 한다. / 김정일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

“
북한 주민의 사회주의는 1980년대 후반 들어
이념과 생활권이 이중하게 되고 식량과
생활의 확보를 위하여 기대하기 보다는 개인
스스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크게 달라졌다. 즉
암시장 및 지하경제의 선호, 화폐에
대한 가치 평가, 개인소유주의, 그리고 뇌물의
유행, 정치와 일상화 등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확산되었다. 이전에는 북한 주민의
경제적 기초를 사회적으로 인출되어
국적 부분에서 출세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돈을 버는 것이 개인의 자취부
를 나타내는 것이 되었다.”

”

람은 극히 드물다고 한다. 개인의 어려움이나 불행에 대하여는 팔자 탓으로 돌리며 제도의 탓으로 돌리지는 않는다고 한다. 다른 교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다른 경험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외국의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어떠한 다른 정보도 접해본 적이 없는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핵심군중과 기본군중의 중간간부들에 대한 불만은 매우 심하다고 한다. 그 불만의 대상이 김정일이나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라 중간간부라는 점에서 이중적이며 김정일에 대한 외양적 순종이다. 가령, 옛날보다 못산다는 불만을 할 때 그것은 김정일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중간간부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김정일 밑의 간부들이 김정일의 지시를 옳게 이행하지 않으며 이기주의와 부정부패에 탐닉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간간부들이 위로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며 자기욕심, 진급에 급급하기 때문에 북한이 못산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복잡한 군중의 경우는 불만의 경우가 더욱 심하다. 기본군중처럼 체제에 통합되어 정치적으로 인정받아 출세하기 보다는 개인주의적 실용주의에 탐닉해 있거나, 유학생이나 성분 불량자처럼 체제로부터 이미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외국경험을 한 사람들은 대체로 북한체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복잡한 군중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가족 중에 김정일의 통제정책에 위반자로 걸려 피해를 본 사람들,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김정일에 대하여 비판은 못하지만 속마음에서 김정일을 존경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김정일에 대하여는 감히 비판을 못해

도 중간간부들에 대하여는 매우 적대적이다. 간부들에 대한 불평불만은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옛날에는 찾아볼 수 없던 저항적 행동이 일상생활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된다고 한다. 식량배급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면 배급소에 주민들이 몰려가서 항의하고 배급소 유리창을 부수곤 한다고 한다. 당간부들이 간부직위를 악용하여 다 떼어먹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면서 분개하여 저항한다고 한다. 암시장에 물건을 거래하는데 안전원이 장사를 못하게 하거나 죄판을 뒤집거나 물건을 뺏으면 안전원을 구타하거나 노골적인 반항을 한다고 한다. 나라에서 먹고 입을 것을 안주는데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면서 반발을 한다고 한다.

복잡한 군중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집단은 외국경험을 한 유학생, 일부의 무역기관 종사자, 벌목공 등이다. 북한에서는 좋은 아이를 외국유학 보내면 완전히 반동이 되어 돌아온다고 한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는 유학생들에 대해 감시원 1명을 붙여 유학생 출신간 접촉, 해외목적 내용 발설 여부 등을 중점 감시하도록 하면서 6개월 마다 1회씩 집체사상교육을 시키고 신원문건에 유학생 출신임을 기록, 소속직장 당세포와 주거지 인민반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당국에서는 성분이 제일 나쁜 것으로 분류하여 문건에 기록하여 간부로 등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북한에는 이미 체제비판의 싹이 트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

군중의 경우는 비판의 화살이 김정일에게까지는 아직 미치지 않지만 간부들을 겨냥한 비판은 외부의 자유화바람이 조금만 더 들어오거나 현재의 의식에 질적 변화가 생기면 시간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정보차단, 폐쇄주의가 지속되는 한에서만 유지되기 때문에 개방을 하여 외부의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매우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체제가 위기에 처해있는 대외고립 문제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지난 수년 동안 계속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라는 미명 아래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이러한 사상동요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암시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의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확산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규제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북한은 암시장 성행의 근본 원인이 되는 중국 상인의 유입을 통제하고자 시도하였다. 중국 동포들이 북한거주 친척 방문을 이유로 북한을 방문, 한국 상품을 비롯한 외국상품을 공공연히 반입하여 팔매하고, 주민들에게 외국소식을 전

해주는 정보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1991년 경에 중국인의 장사를 금지시킨 적이 있다. 이 조치에 대해 중국상인들이 무산 군당청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했고 또한 중국의 길림성 당국도 항의를 하자 다시 중국인의 장사가 재개되었다고 한다.

둘째, 북한은 '비사회주의의 (타파) 그루빠'를 조직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비사회주의의 그루

빠는 한중수교 직후인 1992년 10월 김정일의 지시로 평양을 비롯한 각 시, 도 지역별로 검찰, 사회안전부, 당위원회, 사로청, 직맹 등 5개기관에서 각각 동수의 인원을 차출하여 구성되었다. 특급기업소의 경우 약 30명, 접경지역인 신의주에는 큰 기관이

“ 북한에는 이미 체제비판의 싹이 트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군중의 경우는 비판의 화살이 김정일에게까지는 아직 미치지 않지만 간부들을 겨냥한 비판은 외부의 자유화바람이 조금만 더 들어오거나 현재의 의식에 질적 변화가 생기면 시간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정보차단, 폐쇄주의가 지속되는 한에서만 유지되기 때문에 개방을 하여 외부의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매우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

나 기업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총 300명 규모의 그루빠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기득권층의 방해로 실패하고 1993년 말에 해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비사회주의의 그루빠'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 도별로 '마감총화'를 실시하고 이 사업을 끝마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사

결론

업전개 1년여 만에 이 조직의 활동을 사실상 중지하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비리를 캐면 캔수록 간부들의 비리가 고위층 간부에게까지 확산되었음이 확인되고 동시에 인민들에게 간부들의 비리가 알려지게 되자 김정일의 지시로 그만두었다고 한다.

또한 '그루빠' 요원들이 실적 위주로 일을 추진하여 10여년 전 사건을 문제삼아 주민들을 마구 체포하는가 하면 주야간을 막론하고 사무실, 작업장과 일반 가정까지 불시에 들이닥쳐 주민들의 생산품 절취여부 및 불법 거래, 한국산 물품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고 이를 구실로 각종 뇌물을 수수해 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비사회주의 그루빠 활동에 대해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른 간부층은 제외된 채 먹고 살기 힘들어 할 수 없이 법규를 어긴 일반 노동자들만 애꿎게 처벌을 받았다"는 등으로 비판하고 있어 이 사업을 서둘러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북한은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사회통제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폐쇄주의와 사상통제 등 사회통제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통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의 우상화 작업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최근에 김정일의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결정한 것은 사회통제를 위한 일인독재체제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대로 북한은 대내외적 위기 상황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었지만 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김정일 정권의 장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김정일 정권의 운명은 경제회생 정책의 성공 여부, 경제회생을 위하여 취할 부분적인 개방이 가져올 자유화의 바람, 경제회생의 속도와 방법을 둘러싼 지도층 간의 노선 갈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김정일 정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의 구조적 상황은 경제적 효율성 회복을 위해 자본주의적 제도의 도입, 국제사회에 적극적 편입과 같은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자기 아버지인 김일성의 부정을 의미하는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주도할 수 없을 것이며, 동시에 오랫동안 폐쇄주의를 유지해온 체제가 개혁과 개방의 충격을 소화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이 김정일 정권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이며 모순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 체제의 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시점은 또 한차례의 시행착오를 경험한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김정일